

[ 4·9 총선 ]

## 전국 정당별 의석·표심 분석

## 민심은 '국정 안정'을 택했다

민주 '견제론' 지지 못얻어 개헌 저지선 실패

저조한 투표율, 민주 후보 수도권 참패 요인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민의 표심은 경제 회복을 위한 안정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견제론을 내세웠지만 81석에 그쳐 당초 목표인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은 국정 운영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된 반면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권력까지 장악한 한나라당을 견제하기에 힘이 부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과반 확보, 안정론에 힘=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는 절대안정의석인 '100석' 확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당초 이번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사 파동에 따른 여론 악화와 공천 파동이 겹치면서 과반 의석 확보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공천 파동의 후폭풍에 따라 영남권에서 '박풍'이 거세게 불고, 충청권에서는 자유선진당이 선전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과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에도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는 표심이 민주당의 '한나라당 견제론'을 암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도 한나라당 승리에 상당한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철파, 견제론 지지 못얻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80석을 겨우 넘어서면서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제라는 시대적 화두를 민주당의 이미지로 고착화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기간 내내 민생경제 회복과 한나라당 견제론을 내세웠지만 경제 실패 세력이라는 딱지를 벗는데 실패한 것이다. 여기에 자체적인 동력 부족도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대적 화두를 끌어안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만한 내부적 정치적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뤄졌지만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은 이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선거 초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미숙과 한나라당의 공천 과문 등이 겹치면서 호기를 맞았으나 자체 동력 부족으로 여권에서 끈 민심을 아당 돌풍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절반의 성공으로 그친, 박재승 공심위 위원장의 공천 특검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저조한 투표율도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석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김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향후 정국 어떻게?

한나라당 신승과 민주당 체면 유지로 귀결된 18대 총선 결과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책공조와 합종연횡의 어수선한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간신히 과반을 달성한 한나라당은 같은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의 공조를 통해 정국 주도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80석대로 패배를 모면한 민주당도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개혁 진영인 민노당과 청조한국당 등과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외형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신승으로 보이지만 보수계열 당의 선전으로 내용적으로는 '보수당'의 압승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 이는 진보세력에 내어준 의회 권력을 4년 만에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정치권 합종연횡 가능성

## 한, 親李-親朴 당권 쟁투 불가피

민주, 선진 등과 정책공조 예상

대북관계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에서 한나라당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차질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당권 쟁투가 예상된다. 특히 신승을 거둔 친이계에 대한 공격이 집요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박연대와 같은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과 관련, 두 계파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애초 목표인 '100석 확보'에는 실

패했지만 대선 패배 직후 열렸다는 시기적 문제와 사상 최저 투표율이라는 악조건을 끊고 80석 대를 차지해 부족한 나마 국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 노선을 같이하는 민노당과 광조한국당 등이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이 큰 부담이다. 애원 공조의 제1 대상 세력이 힘을 갖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비록 성향은 다르지만 자유선진당 등과는 사안별로 공조를 시도할 가능성은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광주·전남 총선 결과

DJ 영향력 줄고  
민주당 체면 유지

광주·전남지역 18대 총선 결과는 무소속 돌풍과 민주당 체면 유지, 나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20개 지역에서 16명의 당선자를 내엇발임을 재확인했다. 나머지 4석은 모두 무소속이 가져갔다.

반면 20개 지역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단 1석도 겸기지 못했다.

17대 총선에서는 20석 중 열린우리당이 14곳, 민주당 5곳, 무소속 1곳에서 당선됐다.

◇무기력한 한나라당=당초 예상했지만 한나라당은 광주·전남에서 한석도 얻지 못해 교두보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해 연말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선전한 것으로 기점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눈 높이가 높아졌지만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대부분 후보

가 10%를 훨씬 밀드는 성적을 거뒀다. 영남인 사편증, 비례대표 호남 배려 약속 폐기 등 잇따른 후남 소외 정책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실망을 불렀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광영(광양), 김문일(담양·곡성·구례), 정용화(광주 서갑) 후보 등은 10%대 중 후반의 성적을 거두며 가능성 을 보였다.

◇사그라지는 DJ 영향력=김대중 전 대통령의 암울적 지원을 받아 광주·전남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3명. 박지원(목포)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광주 북갑) 전 민주당 대표, 차남인 김홍업(무안·신안) 의원 등이 이들이다. 하지만, 이중 박 전 실장만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그만큼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남인 김 후보는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의 열성적인 지원 행보와 상대 후보들이 비교적 약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선의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체면 유지=애초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7석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16석만 차지

/박지경기자 jkpark@